

#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은행의 대응전략

고 려 대 학 교  
李 弼 商



## 목 차

1. 금융낙후와 경제비효율 .....	7
2. 제2의 관치금융체제 .....	11
3. 전방위적 금융개혁 .....	15
4. 은행의 대형전문화와 국제화 .....	19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실물경제 발전을 제약하던 요인을 해소하여 21세기 선진경제 달성에 기여하고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본고는 금융을 시장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기본골격으로 보고 과거 30년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적 낙후상 및 이에 따른 국민경제적 비효율을 분석한다. 다음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분석에 입각해서 정부가 제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한다. 여기서 정부의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실물경제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기득권층의 이익보호와 관료주의 지배체제라는 기본골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제2의 관치금융체제형성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개혁의 요체는 관치의 탈피에 있음을 전제하고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고 건전하고 공평한 성장을 위한 기본틀로서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 금융개혁안을 제시한다. 또한 금융산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과 금융개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은행의 자율화와 대형전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 1. 금융낙후와 경제비효율

우리나라 금융산업낙후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동원편의상 중앙은행과 산하 금융기관들이 정부통제하에 들어간 것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정부예속은 금융기관들의 기능을 관치금융의 창구로 제한하면서 금융은 물론 경제의 구조적 낙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이 본래의 위상을 상실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이 과잉통화증발이다.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경제 성장율은 8% 수준인 반면 통화증가율은 25%가 넘었다. 이러한 과잉통화 증발은 정부의 선별적 자금배분과정에서 자연히 대기업 등 일부계층의 혜택으로 갔는데 이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부당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과도한 통화증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년 20-30%에 달하자 더욱 문제가 된 것이 부동산 투기이다. 물가불안이 계속될 경우 구매력 손실에 대한 보전이나 재산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편향적 수요가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국민성에도 물가불안이 구조화되자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폭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부동산 투기가 가열되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일부계층은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시켰다. 이렇게 되자 결국 궁극적 피해자는 서민들이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십년을 저축을 해도 아파트 한채 사기 어렵게 된 것이 바로 이 투기의 결과이다.

여기서 경제운영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투기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다. 투기가 만연되어 부동산값이 폭등할 경우 전, 월세 및 임대료가 오르면서 일반물가는 즉시 따라 오르게 된다. 그러면 투기와 인플레이션은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 상승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경제의 숨을 막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투기의 악순환(inflation-speculation spiral)이다. 이 악순환은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富의 정상적인 형성을 어렵게 하여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리라는 기대심리의 팽배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감퇴시켜 성장의 원동력을 잃게 하고 있다.

결국 우리경제는 관치금융하에서 유발되는 투기와 물가의 악순환속에서 성장잠재력을 잃는 악의 굴레가 씌워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속에서 지난 86년 부터 유입된 무역흑자는 산업자본보다는 투기자금으로 흘렀다. 이에따라 사상 유례 없는 물가-투기의 대형악순환이 유발되었는데 이로써 경제는 거품이 되면서 산업활동이 위축은 물론 계층간 소득격차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여기에 89년 11. 14 경기 활성화조치와 12. 12증시활성화조치, 90년 4. 4 경제종합대책 그리고 92년 5. 27한은특용조치 등 연쇄적인 통화증발조치는 투자보다는 투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경제를 표류상태로 이끌었다. 여기에서 대형거품이 가시자 최근 우리경

제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기업들의 소요자금은 막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금융시장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 저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외채도입과 통화증발을 통하여 정부가 직접 대기업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준 것이 금융운영의 기본골격이었다. 이와같은 관주도 자금지원체제하에서 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의 원동력 역할을 한 것은 우리경제로서 매우 의의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운영은 자금흐름과 기업생산활동에 있어 부정적 효과가 컸다. 우선 정책적으로 저리의 은행대출혜택을 받지 못한 다수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자금압박속에서 비싼이자라도 감수하는 資金源을 찾게 되었다. 한편 통제된 이자율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금융기관의 저축을 회피하고 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금융수단을 찾게 되었다. 이 상황하에서 私債市場은 자연히 대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채시장의 발전은 투기자금을 대규모로 형성하여 부동산과 증권의 교체 투기양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자금흐름이 전반적으로 短期浮動投機化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사채시장은 단자회사의 설립과 함께 단기금융시장으로 양성화되면서 우리경제 자금흐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사채에 뿌리를 둔 금융운영이 20년 이상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금흐름의 왜곡이 그대로 제도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금융환경하에서 제조업의 자금조달패턴을 보면 단기유동부채가 주류를 이루면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예 자금이 가지않거나 높은 금리로 가고 대기업에는 저리의 특혜자금이 지원되는 자금배분의 양분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로인한 피해는 경제의 균형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돈이란 것은 원래 쉽게 얻으면 쉽게 쓰기 마련이다. 정부에 의해 특혜형태로 자

금이 주어지자 이 돈은 기술혁신이나 신상품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출고를 높일 수 있는 부품조립산업에 집중투자되었다. 여기서 주요소재와 부품공급은 일본에서 공급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일본에 예측성을 갖게 되었다. 흔히 우리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른다.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잘 잡기로 유명한 새의 일종이다. 이 새를 훈련시키면 물고기를 잘 잡아오기 때문에 어부는 배에 가만히 앉아 쉽게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경제가 이 가마우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품을 대주고 그 부품을 조립하여 수출을 해오게 한다는 데서 비유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금융에서 문제가 컸던 것이 기업과 은행이 같이 부실화되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대출의 결정이 은행의 책임하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었기 때문에 부실화율은 당연히 높았다. 이렇게 되자 은행은 부실기업을 계속 살려줘야하는 뒷에 걸리고 말았는데 따라서 실물산업과 금융산업 발전이 동시에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최근에 있었던 주식회사 한양의 부실로 상업은행이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은 이러한 비효율의 한 예이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결국 돌파구는 규제금융으로 귀착된다. 규제금융제도는 기업이 부도의 위기를 맞고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그 기업을 살려주는 제도이다. 이때 기업이 부도위기를 자주 맞는 것은 결국 정부와 기업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데 규제금융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 기업의 위협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사실 기업에 제공된 은행돈을 국민의 저축으로 볼때 은행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원금까지 손해보는 저축으로 형성된 돈이다. 이렇게 일반국민들이 손해를 보며 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또 기업위험까지 전가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와같은 금융제도하에서 극한의 부도덕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업의 사금고화 현상인데 기업은 부실화되어도 기업주는 은행돈의 계속적 지원을 받으며 부동산 매입이나 주식물타기 등을 통하



여 엄청난 불로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7월 정보사땅 사기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고도의 수법을 쓰는 사기단들이 정보사땅을 제일생명에 허위로 팔아 500억원 가까이 사취한 대형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업은행 명동점장이 CD를 사채거래 수단으로 불법이용하면서 치열한 불법 예금유치경쟁을 벌이다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에는 동화은행장 구속사건에서 정치자금조성과 관련 엄청난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덕진씨의 스룻트머신 사건이 정치인, 검찰, 경찰관계자 등이 연루된 대형 권력형 금융비리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로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비리들이 화산의 용암처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더이상 비리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낙후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경제비효율을 유발하는 차원을 지나서 탈법지하경제의 온상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2. 제2의 관치금융체제

그러면 이와 같이 금융낙후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과연 타당한 것이며 또한 그 효과는 얼마나 클 것인가?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내용은 (1) 금융규제의 완화 (2)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3) 금융산업구조개선 (4) 금융국제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금융규제완화는 금융의 자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 은행장인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경영전반에 걸친 자율화추진, 정책금융제도의 축소 및 정비, 대기업여신관리제도의 개선, 부실채권의 조기정리와 신규발생억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방안은 통화채의 강제배정, 대출창구지도 등의 직접규제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 통화관리 방식을 금리의 가격기능에 근간을 둔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통화신용질서가 위협해질 것에 대비해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산업구조의 개선은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권역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겸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해서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신규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며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국제화의 기본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맞추어 국민의 편의증진과 기업의 해외활동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쟁을 통한 국내금융산업의 효율증진을 위해서 금융산업의 개방을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신경제 금융개혁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과거 30년동안의 낙후성을 벗고 산업자본의 효율적인 공급과 건전하고 공평한 국민재산의 형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우리경제가 선진국 경제체제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견인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의 금융개혁안은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일관해 오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금융산업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성격의 객체로 파악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더구나 이번 개혁안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내용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최선의 상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 설정이 이상적이다. 또한 금융규제완화 내용을 사안별로 명시하고, 은행장선출등에 있어서 금융자율화의 내용을 세부화하였으며 금융구조개선의 내용이 금융기관 종류별로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제 금융개혁안은 화려한 목표제시에 비해서 실물부분과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으로 실현성이 크게 의문시 된다. 경제에서 실물부분과 금융부분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따라서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을 논하는 것은 장님의 코끼리다리 만지기와 같은 우가 될 수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실물부분의 구조적 모순은 심각한 상태이다. 경제운영이 중앙집권적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다원적인 불균형문제가 심화되었다. 우리경제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나누어 빈부간의 소득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성장불균형등 거시적인 불균형과 산업구조 불균형, 기업 소유불균형, 자금조달불균형 등 미시적인 불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거시적인 불균형은 건전한 투자의욕과 근로의욕을 상실시킴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막고 거품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모순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시적 불균형은 기업의 위험도를 높이고 경영을 부실화하며 심지어 기업을 기업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서 국민경제가 내부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폐해까지 입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번의 금융개혁은 이러한 실물부분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이번 제시된 개혁안은 이렇다 할만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금융산업입장에서 발전방향을 나열한 것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번 금융개혁안에서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기득권층의 이익보호와 관료주의체제 유지라는 기본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금융개혁에서 기득권층 이익보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론이 없고 거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개혁과 경제흐름의 정상화에 기본전제인 금융실명제에 관하여는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실

시”라는 원칙론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최소한의 금융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첫단계인 금융거래 실명화조치만이라도 실시계획을 밝히고 종합과세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확대시켜주는 조치로 또한 문제시 되는 것이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이다. 금융기관경영의 자율화라는 명목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의 축소개편은 오히려 재벌기업들의 금융특혜와 산업구조집중화를 방조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이 관료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는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신경제 금융개혁안은 거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율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돈줄은 실제로 정부가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 역시 오히려 금융자율화를 역행하는 조치로 보인다. 금융감독은 사실상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통제에 주요 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강화하는 것은 곧 관치금융의 강화가 된다. 공정한 경제체제하에서 실질적인 금융자율화가 추진될 경우 효율적 시장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정부의 감독기능의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는 금융보험등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감독을 강화해서 해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금융규제완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제 2단계 금리자유화에 대해서 이번 개혁안은 올해안에 실시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금리자유화는 경기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면 금리가 단기에 많이 올라 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금이라도 바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금리자유화를 계속 연기하는 이유는 자금의 할당이라는 금융

에 대한 관료적 통제 개념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시중은행장 인사자율화는 금융기관 경영자율화의 구체적인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장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행장 3인, 주주대표 4인, 고객대표 2인 등으로 되어 있어 정부의 직, 간접적인 관여가 매우 용이한 상태이다. 특히 동위원회에서 전행장들의 영향력 행사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율화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시중은행장의 선출에서 이와 같이 정부의 관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실질적인 자율화의사가 없는 것으로 우려된다.

관료주의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또한 큰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자의적인 금융구조 개편작업이다.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금융구조개편안은 개편작업 자체가 관료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최대과제는 무엇보다도 관치체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향후 금융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개편작업에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는 일단 배제되어야 했다. 정부가 개편작업을 주도할 때 개편작업은 관치금융에 대한 합리화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이번 제시될 금융구조 개편안은 당사자인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의사나 객관적인 외부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뚜렷한 기준이 없이 정부 임의에 의해 정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 3. 전방위적 금융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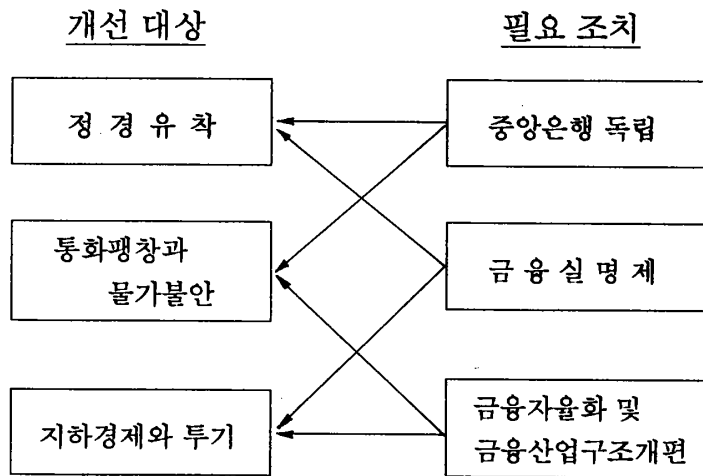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개혁은 무엇인가? 왜곡된 실물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형성과 소득배분이라는 금융의 본래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개혁은 금융실명제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모든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경제자체를 검은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본조치이다. 더 나아가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종합과세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공평한 세정과 부조리 척결에 필수적 도구가 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때 다음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정경간의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끊게 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과 반대급부의 암거래를 차단하여 정치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둘째 투기와 물가의 악순환을 제거하여 국민의 재산이 기득권계층의 부당이득으로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재벌기업의 불법상속과 증여를 막아 부의 세습화를 막고 기업이 기업주개인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자금흐름이 투기에서 투자로 정상화됨에 따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을 되찾을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비실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주주와 큰 손들의 투기잔치상이 되다시피 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시장구조가 개선되어 국민의 정상적인 부의 증식의 장으로 증권시장이 바뀌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기 횡포를 막아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실시가 전부는 아니다. 우선 부도덕한 정경유착을 단절하기 위해 주요조치로 필요한 것이 금융실명제의 실시이다. 그러나 정경유착을 막기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특혜성통화공급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중앙은행 독립 역시 필요하다. 한편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을 억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이다. 그러나 공급된 자금을 투기와 소비로 흐르는 것을 억제하고 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구조개편 또한 물가불안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한편 투기를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금흐름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구조개편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볼때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은행독립 그리고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구조개편 작업은 하나의 전방위적인 유기적조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분적인 금융개혁은 절름발이 개혁으로 구조적 비리의 발생 여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동안 정부를 포함하는 반대세력이 부작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자금출처는 묻지 않는다는 기본원칙하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오히려 반대하는 기득권계층에 돈세탁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기득권계층의 집단적 반발이 있어 실시가 어려웠으나 중앙은행 독립은 관료주의 배제라는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사실 중앙은행 독립은 통화의 정치적 증발과 물가불안을 막는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금융자율화는 근본적으로 금리의 자원배분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리 자율화는 물론 인사의 독립 등 금융기관의 자율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자율적 시장운영의 전제조건이 금융기관소유의 분산인 바 현재 재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볼 때 이번에 제시된 금융개혁안은 개혁의 기본적 전제과제인 금융실명제 실시와 중앙은행독립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핵심없는 피상적 개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여기서 특히 금융산업구조 개편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여 오히려 금융시장 기능이 더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상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부가 나누어 먹기식으로 업무할당을 남발함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중복 등 금융기관 자체의 비효율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관규제라는 틀 속에서 그동안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무수히 난립해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분업주의에 속하나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기능 겸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금융기관을 재정비하는 것 보다는 일단 각 금융기관이 제기능과 위상을 찾는 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본 모습을 찾은 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통폐합을 꾀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개편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율화이다. 즉 진입장벽, 업무통제 등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각 금융기관들은 적자생존의 원칙하에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자율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금융개방에 대비하여 각종 개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해 나아갈때 금융권의 재편성 및 업무영역조정은 자생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될때 국내금융산업은 자연히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물론 외국금융기관들의 횡포와 지배를 막아주기 위해 정부는 개방압력을 최대한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산업구조 개편안중에서 체신예금을 정비하겠다는 것 또한 관료주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체신예금은 경제개발초기에 국가정책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농어촌 등 민간금융 취약지역주민의 저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되었고 농수축협 등 지역금융기관이 확충되었으므로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업무의 취급을 억제하고 체신예금 조성자금 중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제외하고는 전액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위탁하여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도시지역의 상대적 낙후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국민경제 전체를 기울게 할만큼 심각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간금융이 취약한 농어촌에 대한 체신금융의 역할은 낙후지역경제의 발전차원에서 과거보다 더 큰 의의를 갖는다. 경제발전에서 금융은 젖줄의 역할을 한다. 돈이 흘러야 경제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낙후부문일수록 금융의 혜택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따라서 상대적 낙후가 심한 농어촌등에 대한 체신금융은 오히려 확대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농간, 지역간 등의 격차를 극복하고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크게 된 상황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체신금융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더 중요시된다.

이번 금융개편안이 그동안 제 2의 관치금융체제 골격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체신금융에 대한 정비방안은 재무부중심의 관치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 4. 은행의 대형전문화와 국제화

최근 정부는 3단계금융자유화 금융시장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내 은행에 외국지분의 허가, 채권의 발행과 유통시장 개방, 자율변동환율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앞으로 5년동안 자본 및 외환거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장벽을 헐겠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취약성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앞으로 밀어 닥칠 개방의 회오리때문에 폐해가 엄청날 것 같다. 여기서 특히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이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불안과 국부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의 국가들이 금융개방을 허용하고 난후 물가불안등의 난관이 겹쳐서 파국으로 간 전

철을 우리 경제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정말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을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금융산업을 지배할 경우 경제의 근간을 지배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대외경제전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금융후진국에 금융개방압력을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힘의 논리까지 구사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선진국들의 금융개방압력하에 엄청난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은행의 대형국제화전략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EC통합에 따라 은행의 범유럽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은행의 합병대형화가 진전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외진출에 유리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의 은행들은 1986년 금리규제가 완전히 철폐된 이후 과당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은행들간 서로 먹고 먹히는 생존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1년에 200개 이상의 은행들이 도산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살아남는 은행들은 체질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을 집중시키는 미국의 은행들은 전문화전략을 추구하는 은행들과 합병전략을 추구하는 은행들로 대별된다. 전문화전략을 추구하는 은행들은 투자은행의 형태로 전문화를 추구하는 은행과 상업은행의 형태로 전문화를 추구하는 은행이 있는데 투자은행으로서 경쟁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은행들로는 J. P Morgan은행과 Bankers Trust은행 등이 있고 상업은행으로서 경쟁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은행들로는 Citi은행과 Chase Manhattan은행 등이 있다. 한편 합병전략으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은행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내에서 자산규모 6위인 Chemical은행과 9위인 Manufacturers Hanover은행의 합병인데 이들은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2위의 대형은행으로 부상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무역흑자가 증대됨에 따라서 저금리의 자금잉여 현상이 계속되었는데 여기서 은행들은 여신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며 토지와 주식의 매입등 재테크자금을 많이 제공했다. 이에따라 주가와 토지가격이 폭등하여 거품경제가 형성되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토지가격의 하락과 함께 거품이 꺼지자 은행들은 부실채권의 확대로 경영상 압박이 커졌다. 이후 일본은행들은 새로운 변신을 꾀하며 국제적인 은행들로 재도약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비자 금융지향의 합병과 내부 경영합리화 및 기계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미츠이 은행과 다이오고오베 은행의 합병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합병이다.

이와같은 세계 금융의 대지각변동에 접하여 경쟁력부재와 부실채권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금융기관들은 수익기반이 더욱 약화되면서 외국금융기관들에게 희생이 강요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은 과감한 변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생사의 문제가 되있는 바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화, 대형화 및 전산화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금융산업개편에 관료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대형화나 전문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인사조직의 개편 등 내부경영혁신을 꾀하도록 해야한다. 현상태에서 은행들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과감한 변신을 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깊이 새겨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지켜온 국내시장을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금리와 수수료는 물론 서비스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안간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신심사능력의 개발과 리스크 관리기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내은행들은 외국금융기관들을 경쟁에서 물리치기 위한 전략으로 신금융상품의 도입, 금융기술혁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통합화 등 금융혁신 과제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창구로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옴에 따라 자생적 경쟁력 배양이 거의 없는 상황인 반면에 외국금융기관들의 경우 첨단정보기술을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선물, 옵션 및 스왑거래 등 새로운 금융거래의 개발은 물론 금융의 증권화현상을 선도하고 또 은행시장과 증권시장을 연계시키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금융의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시라도 주춤거리면 외국금융기관들에 의한 국내금융시장지배는 시간문제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한편 현대 은행경영에 있어서 전산정보화는 경쟁력의 척도가 될만큼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은행의 정보화는 아직 고객관리정보의 미흡, 업무의 종합기능 부재등 부족한 점은 많으나 창구업무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전산의 근본적 문제점은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국제적 경영전략지원 측면에서의 시스템개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은행업무가 날로 다양화되고 그 양도 방대해지는 것은 물론, 업무자체가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이것을 경영전략차원에서 종합적 정보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향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은행정보화전략은 은행내부의 사무합리화에 그치지 않고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업무영역확대, 기업과 가계의 연계체계 형성, 국제네트워크 형성 등 전향적인 종합체제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같은 전략적인 정보시스템의 개발에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만큼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변화를 거듭하는 국제금융환경하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금융국제화 추진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은 우선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통해 방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격적 차원에서 정보수입능력을 강화하고 신상품 도입과 업무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 기업의 해외활동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해외투자 및 국제영업활동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국제금융능력제고는 피할 수 없는 요구로 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해외활동 지원의 의미를 떠나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거점확보라는 의미에서 경제선진화에 중요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란 단지 국외점포를 설치하고 수동적으로 외국환업무나 추진하거나 해외교포들의 금고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기관화 내지는 범세계금융기관화 차원에서 국제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개척해야 한다.